

제35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9월5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
 - 가. 외교부소관
 - 나. 통일부소관

상정된 안건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 1
 - 가. 외교부소관
 - 나. 통일부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9월 3일 북한이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이렇게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밀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제6차 핵실험은 그동안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과거의 핵실험과는 수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ICBM급 미사일 도발 직후에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중대성 또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엄중하고도 거듭된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오직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만을 초래할 것으로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체제 유지와 생존은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핵물질과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금번 도발과 관련하여 견고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함과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관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핵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과 대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
 - 가. 외교부소관
 - 나. 통일부소관

(14시06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통위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어제 본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어제 채택된 결의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 가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6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현 상황 평가입니다.

어젯밤 이루어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양 정상은 이번 6차 핵실험이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핵실험은 약 50kt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지난 5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강력한 규모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당일 오후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하였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번 핵실험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계기’라고 자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군사 기술 및 북한의 게임 플랜 등 전략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에서 공히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핵무장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체 시간표에 따른 수순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

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한 파키스탄을 벤치마킹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핵무장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한 한미 간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단합되고 강력한 경고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시점에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항이자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소위 ‘벼랑 끝 전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베를린 구상 등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일체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대북제재의 압박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진노선 채택 5년 차를 맞아 핵무장과 경제발전 양측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이번 핵실험은 체제 결속 강화 측면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선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그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온 만큼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현재 52개국 8개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연이어 발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8월 초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서울 불바다’, ‘괌 포위 사격’ 등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그리고 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국면 전환을 위한 대외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는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미 측은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의 압박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그제 저와 틸러슨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핵실험 직후 성명을 통해 결연한 반대와 강력 규탄이라는 입장을 발신하였는데 이는 5차 핵실험 당시 ‘규탄’ 언급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도 강한 입장이며 중국이 그간 관련 당사국들의 자제를 공히 촉구한 소위 양비론적 내용도 이번에는 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느끼는 강한 실망과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5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개막 시점에 북한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진 데 대해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어제 발표된 브릭스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개탄하는 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타 주요국과 유엔, EU 등 국제기구의 반응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 하단 우리 정부의 대응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실험 직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가안보실장이 별도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응징 방안 강구,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기 위한 안보리 제재결의 추진,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미국·일본·러시아·독일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졌으며, 저도 미·일·중·영 외교장관 그리고 EU 고위 대표 등 주요국 인사들과 긴급 유선 협의를 통해 안보리 신규 제재결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한편 안보리 차원에서는 뉴욕 현지시간 9월 4일 한·미·일·영·불 5개국 공동 요청으로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강력한 안보리 신규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에 한·러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한미 간 북핵 대응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제 이루어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9월 4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 발표 이후에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한미 안보연례회의 등 양국 간 외교·국방 협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단키 어렵습니다마는 추가 도발 그리고 긴장 국면 극대화 이후 대화 모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우리의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압박의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제재·압박은 결국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과정에서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 체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일요일 12시 29분경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15시 30분 ‘중대보도’ 형식으로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한 사실을 밝힘으로

써 핵실험이金正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지지 기반 위에 취해진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했다고 보도하고金正은의 핵무기연구소 현장 방문 시 수소탄 모형을 공개하는 등 수소탄 제조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연이은 핵 투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핵실험과 관련된 북한의 추가적 대남·대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 정부 조치 내용입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에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또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외교부 보고와 같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핵실험 당일 장관 주재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매일 오전 장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북한의 예상 태도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도발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북·미 관계 상황을 우선하면서 남북관계는 계속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9월 9일 정권 수립일,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이해서 이번 핵실험을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 대처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및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

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의 태도, 국제사회 공조 및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공감대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는데요. 1·2차 핵실험 때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었지요. 그리고 이때는 핵개발 과정 자체를 사실 흉내를 내면서 이걸 가지고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면 3차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핵개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핵실험을 여섯 차례 하는 동안에 핵실험의 의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작년의 4차 핵실험 이후에 4차·5차·6차 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텀이 짧아지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서 훨씬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는 우선 대단히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통화하고 거기에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한 것이랄지 그다음에 한일 정상 통화, 역시 외교부장관님도 미·일·중·영·EU 외교장관들과 긴급하게 통화를 하고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들 사이에 세 차례 통화하면서 함께 공조와 대응의 가닥을 잡은 것은 대단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까지는 대단히 잘 빠르게 대처를 했고, 또 소집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안보리 회의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신속하게 소집이 되어서 미국 시간으로 9월 4일 아침에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들을 했고요. 미국 측의 입장은 의장 성명이나 이런 어떤 성명을 채택하기보다는 곧바로 제재 결의안 협상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우리 그리고 주요국들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또 어떤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상, 논의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화에 불응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계속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제재의 방법은, 지금 북한을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방법으로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로 이게 결의안에 담겨서 안보리 회원국—상임이사국 또 10개 비상임이사국—이 다 공조를 할 수 있는 문안이 합의가 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가 분명히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element) 중의 하나입니다.

○김경협 위원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즉 됐습니다. 이번에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도 역시 중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유 공급 중단 문제도 중국의 입장,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재를 하든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든 여기에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과거의 사례도 보면 2차 북핵 위기에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대화로 이끌어 내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는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로 미국하고의 기본 공조, 물론 당연히 그것은 중요하지만 중국의 제재나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한·미·중 고위 전략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레버리지(leverage)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런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요, 미·중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중 간 협의 내용에 있어서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중 간 어떤 전략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점은 저희가 그 이전부터 계속 제기를 하고 실현을 시키려고 했던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런 제안이 좀 더 구체성을 떨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국하고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고요. 한·미·중 고위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함께, 대북제재이든 아니면 대화를 이끌어 내는 압박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중이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그 방안들을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

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미 제네바 합의, 북·미 직접 협상을 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북·미 제네바 합의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후에 일단 북핵을 컨트롤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마 2000년대……

1차 핵실험이 2006년에 발생했는데 1차 제네바 합의가 깨지는 과정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농축 우라늄을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94년에 있었던 미·북 제네바 합의가 결렬되는, 깨지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하기는 어려운데요. 1차와 2차 북핵 위기의 타결 과정과 이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핵을 대응하는 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 엄중한 시국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여쭙보겠습니

다.

외교부장관님께서 주요국 외교장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요, 중국의 왕이 부장하고는 어떤 요청을 하신 게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오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일차적으로 제가 핵실험 직후 통화를 한번 하자고 제의했고,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6차 핵실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강한 성명 평가를 하고 향후 안보리에서 중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보다 강력한 결의안 채택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왕이 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왕이 부장께서는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안 좋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국도 상당히 추가 제재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감지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겠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통일부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나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북한이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올 가능성이 당분간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당분간 북한은 계속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관망입니까, 아니면 무시입니까? 이 보고서에 남북관계를 관망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적에는 북한이 지금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이 전술적으로 그렇게 비치도록 행동하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레드라인을 넘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떤 특정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여튼 북한의 핵 능력이 5차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그만큼 완성 단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레드라인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더 추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요 대통령의 말씀이 틀렸다 옳았다 이것을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아니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레드라인에, 그 범주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지금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표현대로 금을 밟은 것인지, 아니면 레드라인과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부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국제사회에 가서도 북한의 제재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나 근거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의 판단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상황 판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다듬어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리에서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말로써 얘기를 해야지 그 제재 결의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마지노선을 스스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또 6차 핵실험 후에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롱하듯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유화책, 대화를 제의하고 촉구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경고하고 또 대화를 촉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를 위한 어떤 실효적 개선 조치나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고가 허언이 되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존중해야 문제가 풀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조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또 국제사회가 만약에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를 강구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유 공급 중단과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의 대북정책, 북한에 대한 저희의 정책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력과 제재를 높인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게 저희 대북정책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의 6차 핵실험은 전략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상당한 상황의 악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안보리 긴급소집에도 같이 공동소집을 했고요. 향후 안보리에서의 논의에도 적극 동참을 하고, 공조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며칠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운전자론은 일단 북한의 긍정적 화답이 있어야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북핵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문제라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도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의 원조는 미국이 아니고 사실 북한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이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설 자리가 없고 북한의 이러한 원칙과 계속된 도발은 오히려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북한에게 버림받고 미국과는 소원해지는 실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전자론이 안 되면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북한이 정부의 유화책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올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도록 미국과 공동 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최소한 ‘남북대화 없이 북·미 대화 없다’ 이런 선언을 미국으로부터 이끌어 낸다면 북한이 현 정부의 운전자론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안 된다면 차라리 운전자론을 포기하고, 남북대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북·미 대화를 견인해 내는 그런 중재자 역할로 전환을 하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 운전자론은 저희가 한반도의 핵심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일본도 다 공감할 하고 있고, 더 넓은 국제 사회에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서 개최한 FEALAC 외교장관회의, 36개의 외교 장관·차관들이 모였습니다만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공감과 지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중심에서부터 한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든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든 긴밀한 공조하에 상호보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심과 변방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치 이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쥐를 잡는 데 있어서 흰 고양이든 흑 고양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중심, 운전자론 이것을 견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래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대목 관련해서 일단 잠깐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운전자론을 중심론으로 지금 해석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문’까지는 안 붙였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견해가 좀 다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태규 위원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대한민국이 쥐고 가야 된다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부의 외교 기조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님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고 그것 관련해서 대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희상 위원**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측 주장에 의하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규모와 외국의 측정치가 좀 다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그 위력이 5차 핵실험에 다섯 배에 달한다는 설이 있고 더 이상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소탄이 탑재된 미사일 한 발로 서울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라는 점 그리고 7월 중에 ICBM급 실험이 두 차례나 있었다는 사실, 이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이 6차 핵실험은 분명한 대북 문제에 관해서 국면의 대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 체인지 상황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또한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희상 위원** 그렇다면 북핵 정책에 관한 종래와 다른 완벽한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 같은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저희 그리고 중국까지도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압박과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안보리를 통해서 주요국과 지금 협의해 나가는 게 그런 어떤 방향의, 저희가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 구조는 압박과 제재·대화·공조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엄중한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라는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희상 위원** 압박과 제재의 강화가 획기적인 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제재의 요소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강한 제재를, 지금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요인을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희상 위원** 그 과정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이기도 하고 대북정책의 목표이자 방향이기도 한 것인데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전제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앞서야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북에 선제 공격이라든지 군사 옵션이 가동된다든지 이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서 모든 사고가 발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 하는데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문희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없습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속에서 핵무장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함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핵을 억제하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나는 일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 시원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가 NPT 가입국이고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 것은 이미 전제된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을 깰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저희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입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것, 전술핵의 재배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으로서는 이 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있고 그 규범 내에서 모든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비핵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보유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문희상 위원**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한미 간 협의로 가능한 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상으로 사거리 800km는 풀렸으니까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 이런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로서는 저희의 방위태세 그리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미 간 공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어제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 한국

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합의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전략자산의 정례적·상시적 배치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희상 위원**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신 것인데 코리아 패싱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외통위에서 거론을 한 것인데 우리를 빼고 미국과 일본이, 미국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빼고 자기들끼리 대북 관계나 남북관계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든지 무슨 꿑꿑이를 꾸민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이, 미국과 북한이 어떠한 비밀적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를 빼고 무슨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은 한미 관계만 튼튼한 공조가 유지되면 걱정할 게 없다. 미국과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갖는 스스로의 역할 분담과 함께 전략적으로 북한을 상대하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참을 수 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나는 마지막의 경우인 미국과 중국이 야합하는 경우, 이것은 강대국 간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지로 우려 사항이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평상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것인데 저희의 상대국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반응을 늘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의 나라 보듯이, 남의 일 보듯이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지기를, 한미 관계 이간질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의 공조만 튼튼하다면 일본하고 무슨 일을 하든, 북한과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믿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너무 우리가 거기서

쪼쪼 매고 코리아 패싱이 아닌가, 우리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열등감에서 나온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튼튼한 이상은 그것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 안보 상황이 나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론이 분열될 때 우리는 망했다’라는 얘기를 나는 늘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서로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국권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결국 분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가 야기된 거예요. 천추의 한이 남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여야 간에 갈등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가도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론이 모아져야 할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도 이렇게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국론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 계신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할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그런 통합된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부에 있는 당국자로서도 바람입니다.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재권**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먼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원유철 위원** 남북한이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당시 주도적으로 했지요.

91년 12월 31일 날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한

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그러한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는 그런 선언으로서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이후 지금 2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26년이 지난 지금 사실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만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북한은 언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이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폐기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2006년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바로 엇그제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이것은 이미 사문화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까 폐기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 휴지 조각을 가지고 언제까지 쥐고 있을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근간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9·19 공동성명 내용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이 인용되면서 계속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유철 위원 장관님, 이미 벌써 30년 가까이, 이 선언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 사문화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 정부만 옥죄고 있고

우리 스스로 올라미를 얹어매고 있는 선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제 이 의미 없는, 사문화된 이 선언은 폐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관님께서 폐기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금 그동안 외교부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입니까? 이번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장 강력한 제재가 담긴 그런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위해서 긴밀히 안보리 회원국들과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미국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신속한, 빠른 시일 내에 결의를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리 제재라는 것이, 제7장하의 안보리 결정은 국제사회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안보리 제재입니다.

○원유철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고 이것 국제사회가 다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장관님, 지금 장관님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매우 엄중한, 저희 안보의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할 게 있고 우리 스스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김정언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핵 억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여튼 저희로서는 방위태세 그리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저희가 그것을 억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고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 스스로의 능력, 한미동맹 차원에서 억지력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NPT 10조 1항이 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탈퇴 조항입니까?

○**원유철 위원** 무슨 탈퇴 조항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PT 탈퇴…… 죄송합니다. 조항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수호를 위해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강력한 핵 억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넘어요.

그런데 NPT 체제를, NPT를 탈퇴하려면 근거 조항이 10조 1항입니다. 비상사태 때는 가입 국가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이 얼른 기억 안 나서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의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예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할 만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형 비상사태지.

그러면 외교부장관께서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많은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솔직

히?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유엔 안보리 갖고 죽 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외교부에서는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강 장관님은 NPT 10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NPT 체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을 다뤄 왔고 유엔 국장일 때도 다뤄 왔습니다만……

○**원유철 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만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비확산에서 책임 있는 국가고, 저희가 어떤 불법 활동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효용성 그다음에 비확산 관련해서는 NPT 등 그런 여러 가지 규범……

○**원유철 위원** 장관님, 됐어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다음에 동북아 정세 등 전체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안보를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발표로 안보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이 불안감을 씻어 드려야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압박, 좋아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NPT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NPT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게 NPT고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NPT 회원국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탈퇴를 시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규범 그다음에 군사적인 효용성, 전략적 효용성, 지역 정세 이런 것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인 안보 이익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유철 위원 장관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잘 검토를 해 놓으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다 가상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 문제가 합의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병석 위원 미사일 협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지금 800km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탄두 중량, 현재 500kg로 되어 있는 것, 이 중에서 우선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제한다는 뜻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1t이 되든 2t이 되든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제한이 해제됐다 이게 기본 합의고요,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 간 좀 더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석 위원 그리고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800km도 개정의 가능성, 즉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거리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번에는 탄두 중량만 500kg을 풀어서 하되 아직 좀 실무적인 것은 양국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긴박하고 중대한 국면이다 하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중대 국면입니다.

○박병석 위원 이 점에 관해서 현재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냉엄한 역학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이 사태가 비상사태라고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중대한 국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저희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요. 특히 군 당국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께도 제가 지적한 사항,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상황이 매우 엄중한 중대 국면이다, 여기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병석 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도 안 된다, 제재도 해 봤지만 실효성이 없다, 대화도 안 된다 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이고 긴장감을 가졌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 하는 허점을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선 마지막 관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언제까지나 북한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곳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도 한계가 있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가 유화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북측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화 제의는 유화책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 또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고요.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명한 원칙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북측과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제가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요, 물론 당장 눈에 드러나는……

○**박병석 위원** 그 말씀,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간극을 보이면 북한은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한·미·중, 미·중이 같

은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두려워하고 그 말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박병석 위원** 따라서 이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남북 간에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점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북한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당신들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저는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언론에서 정말 사실상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관해서 일리 있고 애국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갈 때 다음의 수가 생기는 것이지만 만약 그것에 대한 허점을 보일 경우에는 지금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핵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핵우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길이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재무장론이라든가 또는 전술핵 또는 전략핵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오늘 나온 것만 제가 거론을 드리면,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상시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은 국방 당국에서 답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상시적인지 정례적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어가

정리돼 있는지 저희가 한번 국방 당국에 여쭙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역학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그 목소리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고 우리의 입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 유럽 각국하고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정상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 통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외교장관께서 실효성에 관한 문제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개최로 굉장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화 시점을 조절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 중이고요.

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재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조치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유엔 여러 회원국들을 봤을 때 제재 위에 보고된 여러 가지 제재 조치 사항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경제 조치뿐만 아니라 예컨대 군정 간에 협력을 중단했다든가 북한 공관의 규모를 줄였다든가 또 북한 공관의 상업적인 활동을 중단시켰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의 다양한 형태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지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한미 간 미국의 핵 역지력 확장, 확장역지력에 대한 전략적 협의체 이거를 정례화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역지력 확장을 통해서 한반도에 그런 역지력을 강화시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을 어떻게 실행해서 운영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레드라인, 북한이 ICBM에 핵무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굽는 게 레드라인이지 미국 입장에서 굽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미 레드라인에 가까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전략적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9월 3일 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하신 말씀, ‘아직까지 핵 완성 단계까지는 아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 틈새를 벌리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북한이 ICBM을 실제 사거리로 북태평양에 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게 문재인 정부다, 특히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에 도달하게 됐을 때 미국은 우리하고 상의 없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을 합의해 주면서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 심지어 북·미 평화협정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적 실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라인 설정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북한 체제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넸으면 당연히 기존의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옛날 정책 고수하십니까? 아직도 대화하고 제재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기조는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핵심을 막기 위해서 한미 공조 또 중국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냈습니다만 결국은 핵심을 하는 이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기조의 일부인이었던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저희의 기조 일부인이 거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에 따라서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압박과 제재, 대화·제재 병행론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화도 저희가 여건이 됐을 때 비핵화 대화를 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적 오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황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정책은 수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전 보고에서 말씀드린 CVID, 핵 폐기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제한 게 있습니까?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내놨습니까? 아직도 안 내놓은 게 현 정부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잘못된 대화판에 어떤 변혁론을 갖고 올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북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그 폐기 선언을 해도 주어진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폐기를, 깨끗한 폐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어떤 정책이 될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그게 여야 합의하에 있는 정책이면 훨씬 더 좋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께서 NPT 조항 10조 1항 비상사태 시에, 소위 말해서 자국의 지상이익(supreme interests)을 침해할 경우에 탈퇴할 수 있다, 탈퇴 권리를 얘기했는데요.

장관님 현재는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저쪽은 계속 핵심을 하고 핵·미사일 고도화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까지 않았습니까? 비상 상황

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NPT 10조 1항에 의해서 탈퇴 선언을 못 합니까? 왜 못 하지요? 경제적인, 외교적인, 국제적인 고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네들이 만약에 원전 재료 금수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공조하에, 긴밀한 협의하에 전술핵이든 아니면 한반도 근해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상시 배치해라, 그게 훨씬 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리고 있지요. 북한하고의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정말로 지금 같이 계속 북한이 군사 도발 하는 와중에, 미국의 군사 행동에 명분이 쌓여 가는 와중에 우리도 모르게 한반도 근해 밖에 있는 핵자산을 가지고, 아니면 전략자산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예방타격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동의 없이, 우리 힘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한반도 근해에 핵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갖다 놓는 것, 더군다나 일본의 협조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안 깨고 군사적인 효용성도 훨씬 더 크고 군사 기지에 소위 말해서 B61 전술핵폭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군사적 효용성이 크고 러시아, 중국의 반발도 훨씬 더 누그러트릴 공산이 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송영무 국방장관께서는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생각을 좀 바꾸어서 가지고 이런 전술핵뿐만 아니라 한반도 근해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의, 순환 배치가 아닙니까, 상시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대통령께서 시 주석하고는 통화를 못 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시간을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조율 중에 있습니까?

저는 자꾸 신문에서 통화,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한 게 네 번, 아베하고 트럼프 통화는 열세 번, 비공식적인 게 열네 번…… 통화의 횟수

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통화의 타이밍이 틀렸다, 통화의 타이밍.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7월 28일 날 화성-14형 쏘 다음에 휴가 가셨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한 10일 지나서 8월 7일 날 통화하셨지요. 그 당시에 아베하고 트럼프는 바로 통화했습니다. 또 이번에 6차 핵실험 났을 때 아베하고 트럼프는 막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그다음 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타이밍이나 통화에서 나오는 내용, 메시지가 문제다, 통화 횟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통화의 타이밍이나 통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트럼프가 얘기한, ‘대화를 통한 유화책이 작동되지 않는 것 한국이 알고 있다.’ 그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전에 문제인 대통령께서 ‘묵과하지 않겠다,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그 말에 대한 화답으로 나왔습니다.

또 9월 1일 날 두 분이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문제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위터에 ‘한미 FTA의 위드드로얼(withdrawal), 폐기 논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도저히 한미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 두 분 간의 생각이나 사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문제인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북한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없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장관님?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외교통장관 강경화 한미동맹은 저희 외교·안보의 근간입니다. 말씀하신……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청와대 일각에서 한미동맹의 이견을 자꾸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행태, 한미동맹을 가벼이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국무위원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지금 위기의 본질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자꾸 이완되고 있다는 것, 문제인 청와대에서 자꾸 이완시켜 간다는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위기의 또 다른 하나의 본질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두

분께서 정말로 상식과 원칙의 바탕 위에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한반도 비핵화, 도대체 이게 철학적 또는 도덕적 명제가 됩니까? 아까 통일부장관이 그러셨는지,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겁니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를 무시한다는 정신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시다만, 물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고 그것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바탕이 되는 그런 근거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핵무기에 대한 세계적 전략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사적, 철학적, 도덕적…… 많은 생명에 무참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핵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도덕적 명제하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됩니까, 이게? 기초가 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후자 쪽에,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해 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반도 비핵화가 단순히 남북한 간에 합의된 외교적 합의의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또 민족사적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가능했고 또 북한이 설혹 핵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전히 기술적이고 남북한 간의 상호주의적인 것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갖는 것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도덕적 고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수혁 위원** 지금 여기 많은 자료에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그런데 외교부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북한 의도 분석에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남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플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데 그걸 왜 남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발이지요. 하지만 도발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실험을 해서 WMD를 확보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과는 도발이지만 목적이 도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과적으로 도발이 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북한도 이런 수순을 밟을 때, 미사일을 쏠 때 이것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것을 알고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그렇지만 도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자기의 수순에 의한 거라면, 여기 쓴 대로 수순 차원의 것이라 그러면 자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안보리 도발이든 남한에 대한 도발이든 관계없다, 나는 내 계획대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요? 여기 표현에 이럴 바에야 ‘핵무장 완성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지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써 가지고 모호하고 마치 이것은 도발하고 선전…… 밑에는 또 ‘선전’이라는 말을

어디 쓰셨던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선전, 1페이지에 ‘성공하였다고 선전’인데 ‘성공하였다고 선전’ 하면 좋겠어요.

내용은 없는데 좀 표현이 뭐가 호도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이 아닌 묘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이것을 보았다면 고쳤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다음에 ‘대북 억제력’ 참 많이 쓰고 있는데 무엇을 억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든 순환 배치하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든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든 무엇을 억제한다는 겁니까? ‘무엇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께서 대북 억제력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무엇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조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공격, 미국에 대한 공격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뭐니까, 이게 지금? 억제가 뭐를 억제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군사적으로는 그런 무력도발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이수혁 위원**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나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목적이 뭔지를…… 북한이 행여 남한에 대한 또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 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략자산을 갖다 놓는 것 좋은데, 핵실험 하고 지금 완성 과정에 있다는데 그것 갖다 놓는다고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할까요?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수순에 의해서. 이게 억지가 될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언론도 그렇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욱더 고도화되니까 그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걸 보여 주는 게 억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사적으로……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략자산을 가지고 있고 동원할 수 있으니까 핵무기 만들

어 봤자 필요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 그런 억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러한 의미도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도 목적이 뭔지, 이때 대북 억제력이라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분명한 설명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목적이 뭐지?’ 하고 해도 잘 안 돼요. B-1B가 여기 한 번 돌고 가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억지할까요? 억지가 될까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경협 위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목적 이것이 2차 실험 때는 협상용……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요. 저도 이 협상을 하면서 목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초기에 저도 이것은 다분히 협상용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회답이 진행될수록 ‘아, 이것은 완성이 목표고 지금은 시간 벌기구나,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핵 보유가 목적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또 함부로 얘기해도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용도 아니고 공갈치기 위한 그러한 무기로 쓸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하는데 사실 용어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투키디데스가 얘기한 것은 신흥 패권 도전 국가와 패권 국가 간의 싸움이다. 아니, 미·북한 간에 지금 신흥국과 패권국 간의 전쟁도 아닐 텐데……

뉴욕타임스 기사 난 것을 보니까 러셀이라는 전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이러는 거다 하면서 만일 협상에 응하면 거대한, 빅 트랩(big trap)에 빠지는 것이라는데 아니, 미국이 걸리버입니까, 뽕뽕 묶여져 있는? 아니, 미·북한 간에 협상을 하는데 왜 미국이 뒷에 걸려요? 그렇게 만만한 국가인가요? 북한에 의해서 뒷에 걸릴 정도로 만만한 국가가 아닐 텐데 차관보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외교부나 통일부나 적절한 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고 틀린 것은 ‘아니다’ 하고 해 주는 대국민 홍보가 있으면 좀 오해도 풀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지금 완성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마저도 북한 핵이 소형화·경량화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 한 바가 있고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등 국제 연구기관들도 북한이 실제적인 그런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그러한 목적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미봉남으로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오래 전부터의 일관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논의가 돼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또 완전한 핵 해결이 없는 채로 핵 동결이나 또 핵실험 중단이라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이러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한반도 평화협정이든 또는 북·미 평화협정이든 이것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저희의 목표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평화체제가 아니고 평화협정,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지금 북한이 광 주변에 미사일을 쏘겠다, 또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미국 본토에 EMP탄을 쏘서 미국 전역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업포를 놓고 위협을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차 핵실험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소장이 되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의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떠한 형태의 평화협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외교부장관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는 우방국가와 또 유엔, 국제사회와 함께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주 폭력적이고 또 무분별합니다. 그냥 대화나 설득, 경제적인 그런 유인책으로써는 해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대북 유화정책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야 됩니다. 더욱더 냉철해져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핵 인질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이를 정도의 경제적 압박 그리고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심리전을 전개해야 됩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도 시행을 빨리 하도록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며칠 전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얼마 안 된 뒤에 통화를 통해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나 저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가 도발을 하지 마라 그리고 대화의 창이 열렸다 하는 메시지를 공히 발신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핵실험이 자행된 만큼 변화된 상황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워싱턴과 서울은 물론이고 유

엔의 안보리 차원에서 양 대표부 간 긴밀히 협의를 하자 하는 게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과도 통화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외교부장관께서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어야 하고 또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보복 중단 요구 등을, 이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왕이 부장에게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측의 요청에 따라서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6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안보리에 갖고 갈 것인가 그게 주된 논의 내용이었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최선책은 결국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결국은 북한이 국제 평화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결 라인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한·미·일 간의 공조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주변 4강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최근에 주변 4대국에 대한 대사 내정 뉴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청와대의 안보실장도 안보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외교를 했던 분이시고 또 외교부장관께서도 북한 문제와 같은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조윤제 미국 대사 내정자 그리고 노영민 중국 대사 내정자, 이수훈 일본 대사 내정자, 우윤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이분들이 모두 외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외교부에 수많은 뛰어난 외교관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내정 전에 장관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저도 장관으로서 제 의견을 청와대에 전했고요.

○윤영석 위원 이분들을 추천했다는 말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서……

○**윤영석 위원** 장관님께서 이분들을 추천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윤영석 위원** 장관님의 의향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분들을 장관님이 추천하신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이름들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말씀이……

○**윤영석 위원**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미·중·일·러의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와대 안보라인도 그렇고 외교부장관도 그렇고 또한 미·중·일·러의 주요 대사도 그렇고 모두 비전문가가 포진되어서 과연 앞으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엄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걱정이 되고……

장관님의 그러한 의향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결정이십니다.

○**윤영석 위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될지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술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번에 6차 핵실험에서 나온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50kt 또 일부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100kt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술핵은 10kt 미만의 국지전적인 성격에서의 전술적인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전술핵 재배치만으로 해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NPT의 탈퇴 문제 그리고 핵무장의 문제까지도 일단 우리의

고려 대상에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네 가지 선택지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재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억지력을 높이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는 국지전적인 전쟁적 수단 이런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화의 수단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북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저는 제재나 억지력 그리고 전쟁적 수단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의 포지션이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갑게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접근들은 제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네 가지 선택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재 수단을 높이는 것,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하는 이런 수준으로 안보리의 제재 수단을 더 높여 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런 논란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7, 8년 걸리는 ICBM의 개발 시간 이것이 10년,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이런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에 직면한 이런 위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당장에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시간감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사적 역지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킬체인이라든가 KAMD라든가 아니면 KMPR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죽 검토했습니다. 저는 킬체인 문제는 잘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AMD라든가 아니면 KMPR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5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기에 구축하면서 군사적 역지력을 제고하는 것 이런 것은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핵무장을 하자, 독자적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도입하자 이런 것은 저는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선택이고요, 또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술적 기조였던 비핵화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미국 측에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에 있어서도 전략자산을 운용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정책 이런 것들을 한미 군사동맹의 기조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조금 얘기 순서를 잘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제재나 군사적 역지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현실적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전쟁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지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외과적 처치 이런 표현을 쓰든간에?

그런데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그것도 더 위험한 핵전쟁을 몰고 올 그런 과정으로 비화될 소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총리, 모든 장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들로 임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다시 차분하게, 차갑게 생각해서 이 상황이 엄청하고 긴장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다시 대화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하자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세 차례 상임위 과정에서 우리가 빗방울이 댕돌을 뚫는 심정으로, 우수 천석의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직 장관님들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유연한 윤병세 장관이나 유연한 홍용표 장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부의 장관님들이 되시려면 그렇게 대화와 조건을 연계하지 말고 조건 없는 대화들을 다각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시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건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이 통미봉남 이런 것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정한 시점에서는 결국 북도 한국의 힘이, 남쪽의 힘이, 또 남쪽과 대화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북의 권력들도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운명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당사자 간에 원칙에 합의했던 이것으로부터 결코 이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문제가,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숙명이고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긴장이 최후의 긴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의 권력도 결국 이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화를 준비하고 있느냐, 천재일우의 기회로 단 한 번의 대화의 시간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타고 들어가면서 지금의 긴장을 해지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의 길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조건 없는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냥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그 대화를 높여 가는 과정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 등의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북의 핵과 같이 얼마든지 열어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럴 때, 최후의 긴장으로 마감하고 우리가 새로운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코리아 패싱을 벗어나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제재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 억지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전쟁적 수단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은 우리가 궤도를 상실할 위험성도 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재나 억지력이나 아니면 전쟁적 수단 동원하자는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의 장관께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말씀에 많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의 충언을 조언 삼아 드리고 마치 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보기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나요, 어떤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정한 제재 요소를 가지고 중국이나 타국의 입장이 어떨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의 결과를, 나오는 결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에 직면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

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성명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왕이 장관하고 통화했을 때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가 먼저 전화를 했나요, 거기서 전화가 왔었나요, 왕이 장관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했더니 유엔 제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동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구체적으로 더 대화한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조절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조율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지금 브릭스(BRICs) 정상회의라는 것을 주관하고 계신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석현 위원 시간 사정상?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어젯밤이지요?—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 핵실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시고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 제재 논의를 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 언론에 보도된 그 외에는 다른 말씀 안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을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 하신 것으로 저는……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는 어

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푸틴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내일 가지지 않습니까, 동방경제포럼? 그래서 별도로 정상회담을 따로 하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나누시고, 하여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공유하시고 앞으로 더 협의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핵 문제, 특히 이번에 6차 핵실험이 있었던 만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안보리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저희와의 긴밀한 공조 이런 것을 당부하실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원유나 가스를 공급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원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중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편이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어디 보도에 조그맣게 한 군데 났던데, ‘5월 달에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국장이 핵실험 중단 조건을 제시했었다’ 그런 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핵실험 중단하고 대화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오슬로 방문이 있었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담긴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석현 위원**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다는 건가요, 최선희 국장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핵개발 안 하겠다는 말도 포함돼 있었나요, 대화에 나서겠다고만 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사실

이면 북한이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뭐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킬러슨 장관께서 계속 네 가지의 노(No), 적대정책을 안 한다,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긴급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삼팔선 이북으로 미군이 진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 이상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군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 어제 야당 위원님들이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시던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위협의 뜻으로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상설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할 명분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해야 된다, 또 그리고 북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대로 저희가……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명분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도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사적인 효용성이라든가 비확산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라든가 동북아 정세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만약에 그런 것을 검토할 상황이 된다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사드만 가지고도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와 외교관계가 꼬여 있는데 만일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자칫하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적으로 불리한 점만 있고 유리한 점은 없는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협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중국·러시아입니다. 또 그런 가운

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서 이런 군사적인 조치들은 그러한 측면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신중히 검토까지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이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밖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실 때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는 겁니다.

○이석현 위원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어떤 말씀을 했나 워딩이 보도에 별로 그렇게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씀은 나왔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같이 제재를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문 대통령이?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라고 반응이 나왔을 텐데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했나 궁금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상 간의 대화를 밝히기가 좀 뭐하고요.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시면……

○이석현 위원 물론 거기 가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단독 정상회담……

○이석현 위원 우선 전화를 하셨으니, 전화에서 나온 반응을 봐도 어느 정도 정상회담 내용을 점칠 수가 있거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비밀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로서는 러시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견인한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회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석현 위원 대단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다른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1분 더 해도 되나요, 그만해야 되나요?

○위원장 심재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더 듣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두 분 수고 많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가 있다고, 두 분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보고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두 분께는 좀 송구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두 분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북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견해를 달리하고 처방을 달리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이것은 초당적인 대처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두 분 장관 앞에 두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말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언급하실 때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할 때, 혹시 그 레드라인이라는 정의를 정리하실 때 두 분 장관님도 관여하셨나요? 의견을 내셨나요, 아니면 토의해서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혼자 내리신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연설을 하실 때 저희 부의 의견을 드리고 또 초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합시다만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셔서 하시는 연설들입니다.

○정양석 위원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시고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그 표현을 쓰셨을 때는 그게 특히……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핵이 완성됐다고 하는 이 상황은 그렇게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가 좀……

○**정양석 위원** 넘지 않았다고……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게 딱 금을 그어 놓고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장관님들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은 굉장히 큼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잘 동의하지도 않는 레드라인 선언을 하시고 또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안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됩니까? 그래서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과거의 양치기 소년과 같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정말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대통령의 운전론 혹은 대화론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추미애 대표 연설문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갈려 있습니다. 밖에서는 의심받고 안에서는 남남갈등이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데 두 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보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부처의 보고를 보면 핵개발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남의 일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남북관계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장관들 임명했다. 그렇지만 북핵 완성하는 것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는데 이것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송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과도 대화할 때 ‘미안합니다. 우리 대화 좀 한번, 전 정권과 다르게 대화해 보려고 했고 또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방안을 같이 강구합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분 장관님들은 이런 결정이 되도록 하는 데 오히려 역으로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통일부장관님은 뉴스 보도 나올 때마다 개성공단 언급했습니다. 과연 정말 저 언급이, 저게 맞는 발언인가? 통일부장관님은 그런 작은 메시지들도…… 북한이 이런 것을 오판하도록 일부 기여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핵 때마다 NSC가 열립니다. 열리고 나서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외교부장관이 하신 일은 일본과 미국과…… 내 파트너와 통화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외교부장관께서 하실 일이 상대 장관과 통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4장 대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북한 핵, 문제인 대통령이 막을 수 없지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정권이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남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카드 가지고 노력해 봤지만, 또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 있을 때도 DMZ 쪽으로 전폭기가 가지 않도록 전략적 자산 배치도 축소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자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해야지 ‘아직도 넘지 않았.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양석 위원**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북한에 대한 유화책으로써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변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일정하게 유효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또 북핵 문제가 지금 현재 상

황에서는 어렵고 앞으로 국면 전환이 된다면……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북정책에서 일해 오신 분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 많은 장관께서 개성공단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분이 개성공단만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남남갈등 이런 문제도 역시 통일부장관의 몫입니다. 과거 역대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섯 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핵실험이 끝나고 그다음 날—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야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안보 의식에 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과거부터 안보가 위기라고 야당이 소리치고 대통령께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남남갈등 해소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말씀해 주신 대통령님께서 정당 대표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안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시간이 늦어도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북한이 1년 만에 또 다시 무모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핵무기로 좌우하려는 북한의 어리석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야만적인 도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외교부장관께 한·미·중 협의체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 같은 것은 아직 없으셨는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늘 갖고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6자 협의체가 지금 당분간 쉽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대안으로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련 국가인 미국과 중국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떤 수준이나 방식으로든 협의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없으면 갖춰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좀 더 고도화하는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한미 공조가 어떤 경우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보도된 내용만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옳지도 않습니다.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의 대통령께서 하신 그 공개적인 트윗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공조가 견고함은 어제 이루어진 정상 간 통화 그리고 저도 외교장관하고의 통화 이런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공조가 단단함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북정책의 기초가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원혜영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많이 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와 보조를 같이 맞추고, 그래서 대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때는 같이 하고 또 그것에 북한이 호응을 안 해 오고 계속 도발을 할 때는 압력과 제재를 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핵실험 이후 어제 안보리의 긴급회의를 통해서 또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혜영 위원 이 문제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당장 닥친 상황에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한걸음, 한걸음을 정확하게 잘 맞춰서 달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크게 목표를 놓고 그 방향을 견지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발걸음만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데,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최설희 외무성 국장이 지난 5월 북·미 비공개 접촉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범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원론적이지만 대화의 의지들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좁혀서 그중에 조금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외교부 또 국제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근본적 관점에서의 대비를 좀 당부드리고 혹시 그런 방향에서의 어떤 노력이 준비되고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저희가 북·미 대화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하게 이것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는 이 걸음과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하루하루 하는 걸음을 그 방향에 맞게 가야겠지만 그 걸음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 방향은 양 정상께서 지난번 정상회의 이후에 채택하신 그 성명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남북 간 화해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문서화된 기본 기조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대응에 있어서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원혜영 위원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창구가 만들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뜰이나 북핵 문제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이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는데 이번에 6차 핵실험으로 남북대화는 아예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지금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손만 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남북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물밑 접촉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셔야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엄중해진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시 국면이 전환될 때를 대비한 그런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또 관련된 정부의 지도자들이 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웬만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은 정말 걱정하시는 상태가 아주 많이 확산되고 높은 수준으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 여러분들이 대북 대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는 북한 대화론의 환상을 접고 대북 유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3국의 정상들 간에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베를린 선언이 잘못되었다, 그 내용의 기초를 따져보면 결국은 과거의 대북 합의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핵 포기를 결심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 대통령이 그때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어드바이스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6차 핵실험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북한이 절감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내놓아야 된다 이거야. 아까 정양석 위원이 좋은 말씀 지적했는데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대북제재, 또 미사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썩, 대북정책 또 당신이 얘기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화를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 분수도 모르는 대화 조건 타령, 또 무슨 운전석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이런 북한의 반

응을 볼 때 우리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대단히 불유쾌한 얘기에요. 이런 것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든 간에 대화 유화정책을 썼는데 이런 망신을 당했어요.

아까 야당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한마디 가지고 우리 장관께서 미국하고 아무런 엇박자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운전석론과 대화론 때문에 나온 얘기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간에 대북 관계에 대해서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지식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운전석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가지요. 저는 북한 안보에 관한 한 대통령 혼자서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지 우리 대통령 혼자 가지고서는 어떻게 대북 문제의 운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미국의 전략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야 돼요, 공동으로.

대통령 혼자서 운전석론도 나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는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엇그저께 강하게 유엔을 통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에는 이’입니다. 벼랑 끝까지 가야 협상이 가능하지 북한하고는…… 벼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물건 준다고, 돈 준다고 핵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대북정책의 기초를 바꾸는 데 강 장관과 우리 통일부장관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같은 질문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깊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한 가지 물어보지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대북 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렸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시 저희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런 것을……

○**서청원 위원** 아니아니, 남북협력기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남북협력기금은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논의되는 것은 올해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서청원 위원** 그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서청원 위원** 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그런 식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청원 위원** 언론에 보니까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늘리는 것 자체가 나는 북한이 우리한테…… 약세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기금은 예년 수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으로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한) 위원** 두 분 장관님, 지난 일요일 날 NSC 회의에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최경환(한) 위원** 저는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여쭙보려고 그러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 시절인지 당선자 시절인지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타격하겠다 등등은 뺄이다. 뺄 가지고 뭘 자꾸 그러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과거에 그런……

○**최경환(한) 위원** 그런 기억 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언론보도……

○**최경환(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뺄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에 회의하실 때 그것을 뺄이라고 생각하시던가요, 인식이? 이제는 ‘아, 이것은 심각하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평가, 판단을 하는 것은……

○**최경환(한) 위원** 아니, 인식을…… 그때 뺄이라고 하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때도 느끼셨고 이번에도 여전히 그런 심각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최경환(한) 위원** 이제는 실제로 ICBM용은 거의 개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고 소위 우리 한국이나 가까운 주변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용 이런 것은 이미 핵개발이 완료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미 완료됐다 하는 그런 평가보다는 그 심각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최경환(한) 위원** 그러니까 북한 주장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단거리로 가는 것은 이미 끝났고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 마지막 단계 그것도 거의 끝났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 위원** 이것이 북한 주장이고 국제사회도 지금 대체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최경환(한)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뺄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정말 심각하다, 저는 이제는 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신 멤버였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최근 들어 말하자면 김정은이 막가파식 미사일 도발, 핵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 장관께서는 그 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핵무장화의 완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계획의 수순을 밟아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한) 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대화 강조 노선, 군사행동 반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시설에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그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인 대응이나 더군다나 전쟁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해 본들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수 없을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그냥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또 중국은 지금 사드 때문에 몹시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동조를 안 해 줄 것이다, 그러면 마음 놓고 실험해도 괜찮겠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김정은한테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만의 기조뿐 아니라 미국도 분명히 정상회담 선언에 명시화된 기조이고요.

○**최경환(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도발을 했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어떠한 군사적인 옵션이나 이런 카드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테이블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 왔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야 되고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 정부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다, 그러면 미국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 할 수 있는 거지요. 소위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김정은한테 줬다, 저는 그런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미 공조를 통한 실효적인 방법은 추가적인 제재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 제재를……

○**최경환(한) 위원** 아니, 제재를 하는 것에 대

해서 군사적인 제재 이외에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음이 지금 판명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게 이미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한국 정부는 경제적인 제재 이런 것은 ‘오케이, 합시다’ 하지만 대화로 풀어야 되지 군사적인 행동이나 무슨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계속하니까 내가 김정은이라도 이 시기에 이 정부가 그런 노선을 견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마음 놓고 핵실험하고 마음 놓고 미사일 쏘도 아무런 액션이 안 따라 온다 이렇게 오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가, 물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한 반도가 불안에 싸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드를 쥐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너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한국 정부가 앞서서 계속 테이블 위에 있는 그런 카드를 없다고 자꾸 버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오늘날 저는…… 특히 이번 핵실험을 초래한 결과가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럴 때 갈 데까지 가 보자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안보팀에서 그런 걱정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관님은 ‘핵 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핵 인질입니까? 핵 쏘까 봐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 게 핵 인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뜻을 이해하겠습니다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흔한 불법행위고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최경환(한) 위원** 아니아니, 저는 북한 핵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핵을 자기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왜 다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행동을 못 취하느냐?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을 핵 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노선을 보면 ‘북한이 핵전쟁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김정은이가.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지금 핵 인질을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아니고요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미국이 설득 안 되면 우리도 독자 핵개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은 미국하고 적어도 전술핵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답을 얻어오지 않으면 핵 균형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핵 인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실장께서 NSC 직후에 발표를 하셨듯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저희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저희 방위태세라든가……

○**최경환(한) 위원** 아니, 지금 핵으로 쏘려는데 무슨 뭐 스킨드 미사일 몇 발 쏘고 이렇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리아 패싱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이나 등등 다른 국제사회가 왜 한국하고 대화를 해서, 공조해서 가기를 안 원하겠습니까? ‘전화하거나 연락을 해 보면 그런 액션은 필요 없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귀가 아프지요. 대화로 풀릴 수만 있으면 그것 왜 안 풀니까?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는 이미 대화로는 풀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자꾸 대화로 풀지 왜 행동으로 푸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 봤자 입만 아프지…… 패싱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문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전화해 봤는데 이것 대화로는 이미 안 되는데 계속 ‘대화해야 됩니다’ 하면 한두 번 하다가 패싱해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지 왜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냉엄한 현실을, 이제는 낭만적인 그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요. 물론 전쟁을 막고 평화로 해결하는 그게 대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필요한 액션을 취할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NSC 열리면 그런 얘기도 좀 하십시오. 두 분 장관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들어 보면 여당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야당 위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야당 위원들 얘기 안 들어서 참 우리가 실수한 적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야당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만큼 장관님께서 이 얘기를 새겨듣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전쟁이 납니까? 국민들은 난리예요. 인터넷에 보면 ‘장관은 전쟁 나면 어디에 숨어요? 지하 병커 있습니까?’ 이런 것 물어봐요. ‘국회의원들은 지하 병커에 숨습니까? 전쟁 납니까? 생필품 어디 가서 샅니까? 지하 3층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우려다 이 말이지요.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왜?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정책이나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중국을 다루는 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도 외교 4장 대사가 다 발표됐는데 어떻게 4장 대사를 전부 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들만, 개인으로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경제학자고 정치학 하고 법학 하고 변호사고 좋은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외무부에서 네 사람을 전부 다 비외교관으로 대사를 임명하는지 도 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장관님을 패싱하고 그냥 막 하나요, 청와대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문종 위원** 그것 안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 의견도 분명히 수

럼을 하셨고요. 마지막은 대통령님의 결정사항이
됩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외교관은 하나
도 필요 없으니까 4강 대사는 외교관 아닌 사람
들로 다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
게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4강
이 전부 다 외교관 아닌 사람이 대사가 됐느냐
이 말이지요. 걱정이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당에서 대통령 만나려고 청와
대 갔었거든요? 가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좀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만나 줘야 말
이지요. 아니, 만날 소통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원내대표 말마따나 ‘소통’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 야당 의원 100명이 몰려와서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
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뭐가 바쁘
신지 안 나오셨더라고요, 잠깐만 나오셔도 되는
데. 비서실장도 안 나왔어요. 무슨 정부비서관인
가 한 분 나와 가지고…… 도대체 야당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면……

제가 보기에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여당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
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디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위
원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건 야건 깊이 유
념을 하고, 또 돌아가서 저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여야를 떠나
서……

○**홍문종 위원** 옛날에는 10분이, 여당일 때는
10분이 길었어요. 그런데 야당일 때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레드라인, 레드라인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다, ‘이게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레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레드라인 말하
는 게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이지. 이것 설명하
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장관님은 다 아
실 테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레드라인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히면
이미 레드라인이 아닌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가

끔 가다 하시는 레드라인은 미국의 레드라인이지
우리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지났어요. ICBM은
우리 한국에는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북쪽에서
우리 쏘는데 무슨 ICBM이 필요합니까? ICBM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거
란 말이지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말씀을 계속하
고 계시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뭐
합니까?

그리고 야당…… 죄송합니다. 아직도 야당이라
고 그러네. 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뭐
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계속 대화하자고 그
래요, 대화. 아니, 북한에서는 우리보고 그야 말
마따나 객쩍은 소리를 한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대화하자고 그러면 도대체
이 대화가 가능한 대화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
까? 아직도 대통령께서 낭만적으로 대화를 통해
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임박
한 상황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는
저희가 기초에서도 늘 얘기했듯이 무조건적 대화
가 아니라 여건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화
라는 얘기를 했고요.

○**홍문종 위원** 대화 얘기는 빠세요. 지금 대화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여건? 여건 조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 얘기는 빠야지요.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대화를 자꾸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화가 안 되는 게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죄송해
요, 제 얘기만 막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미
그 얘기는 장관님께서도 여러 번 하신 얘기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마 장관께서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야
말마따나 코리아 패싱을 지나서 이제는 어디 보
니까 ‘폰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왔대요? 도대체
미국하고도 지금 대화가 되는 겁니까? 일본하고
반도 안 된다고 그러고 통화 내용도……

그리고 중국하고 통화한 것은 밝힐 수가 없고
러시아하고 통화한 것은 밝힐 수가 없고.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한테 밝힐 수 없는
얘기는 왜 합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는
데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 제가 장관님한테 말하자면 야단 드리는 게 아니고 읍소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폰 패싱해 가지고, 코리아 패싱해 가지고, 레드라인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가지고, 도대체 한국은 핵 문제에 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레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구의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게 국제사회의 첨예한 안보 현안이라는 차원에서 그 상황의 엄중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민감하게 외교적으로 얘기 나누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고, 또 상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장관님 얘기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동네 슈퍼 집 아저씨도 다 알아요, 우리가 패싱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왜 장관께서…… 지금 물론 외교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살펴보면 슈퍼 아저씨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장관님 얘기보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안중에 있기는 한 거냐? 우리가 무슨 운전대에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게 운전대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님께서 꼭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한국당에서 지금 전술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술핵이라는 것은 나토(NATO)식 전술핵이 있다고 그러대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나토는 양자가 합의해서, 말하자면 핵을 오퍼레이트(operate)할 수 있는 게 나토식 전술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 없이도 우리 한반도의 핵 문제를 북한이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저희 기조의 원칙에 있듯이 이것은 계속 더 강도 높은 제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그 강도 높은 제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당장의 외교적인 사안과 과제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서 전술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여쭙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술핵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입장은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 이것이 저희의 기본 정책 입장이고요. 의견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책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그리고 정책을 바꿀 상황이 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홍문종 위원 바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야 말마따나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단호한가, 그것에 관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는가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만 이 문제가 말하자면 균형 있게 논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고생하십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하고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야기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후보자 시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 지금은 대통령입니다마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레드라인 아닙니까?

레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의미를 전달받지 못했는데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못했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미사일 도발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그게 레드라인을 넘은 건지,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되는 것이고 대화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 시절 이렇게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후보자 시절에 하신 말씀하고 또 취임하신 후에 여러 정보 당국이라든가 그런 브리핑을 받고 보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시는……

○**유기준 위원**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달라졌다고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좀……

○**유기준 위원** 자,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6차 핵실험을 북한이 최근에 강행을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규모도 훨씬 크고 거의 수소탄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최근에 일본 북해도를 지나가는, 거의 ICBM급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당에, 이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분명히 맞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이야기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와대는 레드라인을 넘기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입니까? 자꾸자꾸 레드라인이 색깔이 바래지면서 다른 색깔로 변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라는 것이 아직은 달성이 안 됐다 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건너갈 수 없는 다리라든가 레드라인 이런 것은 비유적으로 상황을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유기준 위원** 아니, 레드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한 번 설정을 해 두면 거기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항을 더 이상 인용할 수 없는 상태, 어떻게 말하면 전쟁의 초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도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상정을 하고 후보자 시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다른 해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거의 ICBM급 미사일을 쏘았다면 이것은 북한은 더 이상 우리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또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의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이 한반도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그 정도 위협에 그쳤는데 지금은 괌을 공격하겠다, 또 지금 사거리로 봐서는 알래스카라든지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능한 상태까지 왔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문제, 극동의 문제, 동북아시아의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고 미국 고유의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북한의 미사일·핵 프로그램은 미국뿐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유기준 위원** 전 세계의 위협이 된 것 맞지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더 이상 코리아 패싱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리아 패싱은 어떨 때 성립하느냐 하면 한국의 문제인데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게 코리아 패싱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 미국의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의 개념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태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한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생각이 다릅니까, 강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패싱은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레벨의 미국과의 공조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유기준 위원 강 장관님, 지금 미국과의 공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공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가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한국이 쓰는 유화책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유화책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SNS에 글을 올린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한미 FTA 폐기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이게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주한 미국대사 누가 임명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결정 발표가……

○유기준 위원 빅터 차가 유망하다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통보는 안 받았습시다.

○유기준 위원 통보 못 받으셨지요?

빅터 차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대화를 중시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터 차라는 대북 강경론자를 주한 대사로 임명한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FTA 폐기 또 대화 강조를 하는 유화책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대북 강경론자 빅터 차를 주한 대사로 임명한 이 세 가지를 봐도 현재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얼마만큼 엇박자를 내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전화 통화를 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말들이 신문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

만 어제 저녁,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분 사이의 협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협의 내용은 분명히……

○유기준 위원 협의의 내용이 무슨 협의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시고요. 앞으로 안보리 결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자 하는 공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합의를 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 미사일 지침 개정해 가지고 중량이라든지 사거리 제한을 좀 풀자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조태열 유엔 한국대사가 ‘평양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유엔 회의에 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원유 공급 차단이라든지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금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평양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조짐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 단독으로 나서서라도?

한 게 뭐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심지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타난 결과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통일부장관에게도 해당됩니다. 통일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 관련한 언급은 지금 당장 어떤 재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 핵 문제가 분명히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준 위원 6차 핵실험에도 대북정책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고 청와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기준 위원 어떤 대북정책이 맞았고 어떤 대북정책이 틀렸다는 겁니까? 지금 결론이 난 게 누가 봐도 이게 뻔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한단 말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데 저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입

장은 분명하고요. 그거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저도 그런 점에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되면 좋겠고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그동안 일어난 전쟁을 보면 러일전쟁, 청일전쟁의 그 주 전쟁터가 한반도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비를 해야지요, 대비를.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한 대비도 저희가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이 아주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 한반도에 사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도발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엄중한 사태로 발전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오래전부터, 정치하기 전에 교수 하면서도 늘 절대 핵으로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인류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대부터 늘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운운하길래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일본이,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개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개발, 핵무장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류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는 21세기 핵 저장고가 된다. 이런 식의 우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북한을 엄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옛 성현이 그런 얘길 했어요.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핵으로 한 사람 핵으로 망합니다. 손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문이

100년 전에 침략적 제국주의 세력이 발호할 때 왕도·패도론을 꺼냈어요. 총칼을 총칼로 막으려 하지 말자. 왕도로써 막아 내자. 패도를 왕도로써 막아 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제국주의 비판 운동을 했던 손문 같은 경우가 100년 전입니다. 쑨원.

이렇게까지 발전해 버렸어요.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북한을 규탄한다고…… 제가 국회의원 돼서도 여러 차례 대정부질의하면서도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핵 폐기, 핵 즉각 폐기하라 이런 주장을 늘 펴 왔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난 십여 년간 미국의 압박·제재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거 종이호랑이 아니냐?’ 제가 생각해도 종이호랑이 아니냐. 말로만 압박·제재 하면서 어떤 실효가 있었어요? 실효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오히려 핵개발을 막아 낸 것은 대화를 했을 때 막아 냈어요.

이것 죽 보세요, 1차·2차·3차·5차·6차까지. 언제 했느냐? 과연 미국이 압박·제재, 압박·제재 하면서 실효성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세요, 압박·제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 우리 정부는 이 엄중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유? 오전에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밀무역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러시아 원유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원유 금수조치를 한다고…… 또 흑철에 의하면 이미 많은 분량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이. 그래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니냐고 생각을 하면서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장관께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대요, 코리아 패싱.

아니, 지난번에 제가 처음 물어봤지요?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군사적으로 미국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단 하나, 우리로서는 한반도가 전장이 되고 우리 명운이 걸린다고 이러면 그건 우리가 중심이 돼서 풀어 나가야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들을 서로 꺼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

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여야를 떠나서 이 엄청난 사태 잘 보면서 북핵 문제 간단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여야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길 아납니까? 미국과 평화협정 맺어서 대화 테이블에 오느냐, 아니면 극한적으로 가서 전쟁으로 발전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사태가 엄중하다고, 그래서 이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명운도 걸려 있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지요.

북한이 지금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추가 도발 가능성은 늘 있는 거고요. 특히 9월 9일 또 10월 10일 이런 계기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통일부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남아 있지요.

현재 문재인 정부도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아직도 북한에 베를린 구상, 베를린 선언, 그 체제 보장하고 평화협정 아직도 유효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베를린 선언에서도 대통령께서 밝히셨지만 이것은 강운을 같이 구사하겠다는 전략이십니다. 그 선언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을 확실하게 하시겠다, 그렇지만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면 또 다른 미래를 같이 개척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구상이 베를린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그간 수 주간 발신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금에서는 도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강력한 제재로써 저희가 반응을 한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 선언이라는 것은 큰 방향이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상황 변화가 있으면서 여기에 즉각적인 대책들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그런데 국민이 지금 또 불안해하는 것은 확고한 목적, 확고한 방침이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론이 쑥 들어가면 확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잘 설득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언젠는 제재·압박 얘기했다가 이런 때 가서는 대화 이렇게 했다가, 대화·제재·압박이 무슨 상충되는 개념처럼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여요.

목적은 협상이지요, 대화이지요. 그리고 수단으로써 압박·제재가 아니겠어요? 이걸 명확히 또 알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대등한 선상에 놓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제재와 압박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태도와 정책을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써 제재와 압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 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야가 서로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한쪽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 한쪽은 지금 대화는 무슨 대화냐,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 이 문제가 난제입니다. 정부도 중간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이제 핵폭탄 소형화는 성공한 것으로, 완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수소폭탄 제

조도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ICBM 재진입 기술 완성만 남았고 이것도 이제 곧 완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오늘 장관도 여러 번 언급을 합시다마는 9월 9일 날 만약에 ICBM 시험 발사로 재진입이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결국은 완벽한 목적 달성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현재 불안에 떨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을 일입니다마는 전쟁이 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한국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자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오직 세계 초일류 강국인 미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엄청난 북핵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국과 철저한 보조를 맞추어서 여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찰떡 공조로 이 상황을 긴장으로, 벼랑 끝 전략으로 몰고 가서 북의 목을 졸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대화, 유화책으로 미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을 빼는 그런 발언만 골라 가면서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지 북한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데 자꾸 북한하고만 대화하겠다는 주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지금은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점을 인정하고도 또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북핵 위기 해결 단계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하자 그런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개성공단 재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자꾸 분위기, 김을 빼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니, 위기 해결 단계에 가서 개성공단 재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이 나올 때 적어도 장관 정도 되시면 지금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걸로 비켜 가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제일 시원한 것은 군사적 옵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감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란 원유 수입국은 모두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란 제재법으로 해 가지고 이란을 핵협상 타결시킨 성공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결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북한 교역의 90%가 중국하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사실상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겨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금융기관·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것이 중국에 타격이 오겠습니까마는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은, 특히 장사꾼으로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만 악화되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는 정작 꺾지 못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남은 방법은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중국을 압박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결국은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우리는 핵 공유를 하고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켜서, 핵 항공모함·핵 잠수함 등을 우리 한반도로 전진 배치시켜서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재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나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이 늘 공개적으로 얘기하듯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분도, 이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또 새로 채택될 제재 결의에 말씀하신 석유라든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

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있어서는 그것도 어제 안보실장 발표에도 포함이 되어 있듯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배치할 것인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장관의 답변 들으니깐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단결해야 되고, 또 여야 간에 가능한 한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야당이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싶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현 정부 집권세력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우리 민족끼리’ 해서 북한 우선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는 ‘양키 고 홈’을 주장했던,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미국이 과연 우리를 마음속 혈맹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6차 핵실험 이후에 청와대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엉뚱하고 필요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인가? 정부가 말하는 동맹국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오늘 현안보고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 도발

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오늘 외교부장관도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그런……

○**위원장 심재권** 그런 제재로 해서 그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한미 군사동맹에 바탕을 둔……

○**위원장 심재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북한이 나름으로 제시하는 대화의 조건은 뭐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아까 북한의 최설희 국장의 발언이 인용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은 1.5트랙 대화에서 나왔던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북한의 대화 조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런데 아까 두 분 장관 말씀을 들으니깐 한 가지 조건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 미 대표단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세 가지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적대행위 중지, 두 번째가 제재 철회, 세 번째가 소위 평화협정 체결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외교장관께요.

현 국면이 위기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나 NPT 탈퇴 조항에 있는, 그렇게 NPT를 탈퇴해야 될, 즉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해야 될 이런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통화를 나누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유 중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곧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통화 시에는 일단 핵이 다시 한번 실험된 데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제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제대로 된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렇

게 반응했다, 저렇게 반응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큰 대화를 앞두고 말씀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으로 우리 외교부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으로 문안 협상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과거의 미사일 도발에 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성명에서 드러난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포함한 추가 제재 논의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지만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 입장으로서는 보도되는 것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가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효과 면에 있어서도 세세하게 예상을 할 수 있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라는 게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든가 핵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석을……

○**위원장 심재권** 그런데 원유 공급을 중단해 놓고서 만약에 그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다시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하게 될 때 그럴 때 대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원유에 대한 제재가 지금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직 제재의 이행으로서 현실화가 안 된 상황에서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위원장 심재권** 이미 일본 강점기 때도 일본은 북한 아오지 탄광의 석탄을 이용해서 액화석유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 관동군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위원장 심재권** 지금 일각의 보도로는 북한이 다양한 석유 수입선을 갖고 있다—제가 볼 때 그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자체적으로 액화석유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보는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필요한 만큼의 원유나 에너지를 확보할 만큼의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액화석유 생산력이 비상시기에 북한의 석유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부문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갖고 있는 판단으로서는 북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우리 정부가, 특히 대통령께서 대응해 오신 입장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명백히 잘못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보를 위해서 철저히 국방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끝으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있을 수 없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3원칙이 적절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화의 조건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화의 조건은 점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오늘 긴급하게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심각한 북핵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그 해법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리고 보니까 답답한 게 초당적

인 협력보다는 또 이번 기회도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 대한 비난과 공격, 흔들기, 흠집 내기, 야당에서 이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에는 빠지고…… 이럴 때 우리 정부만 공격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회의 보이콧 하고……

외통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뜻 동의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외통위가 열렸는데 역시 이런 외통위가 열리는 기회를 또다시 정부에 대한 공격 기회나 흠집 내기 이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차 핵실험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일본·러시아·독일 정상과 통화하고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하고, 대북 최고도 압박을 천명하고 강력 대응 조치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조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미·일·중·영·EU 외교장관과 긴급히 통화하고 대북제재의 강화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장은 백악관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하면서 역시 강력한 응징 그리고 제재 강도의 강화를 천명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대지·공대지 발사 훈련, 무력시위까지 하면서 미국의 핵함모, 핵잠수함, 전략자산 전개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라고 있는데 오늘 야당의 얘기를 보면 왜 대화만 강조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정부 흔들기가 목적인지 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과 제재를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략은 중장기적인 전략입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화를 제의하고 본격적인 6자회담, 남북대화가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화 제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남북대화, 6자회담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보면 이게 단지 한두 달, 서너 달 이내에 무슨 성과가 딱딱 나올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뻔히 알 것입니다. 이걸 놓고

또 코리아 패싱 주장합니다, 코리아 패싱.

지금 이렇게 대북 국제사회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리아 패싱을 주장하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이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이 코리아 패싱입니까? 통일부장관님,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코리아 패싱인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과거 북한이 했던 통미봉남과 지금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개념이 아닌 거지요. 통미봉남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이롭게 하는, 여기에 힘을 실어 주는 행위인 겁니다. 이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고 흠집 내기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오늘 전술핵 배치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 필요에 따라서 선제 타격까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무력시위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하자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고 감정적으로 당연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얘기들을 쉽게 내뱉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당초에 한미 공조의 기틀 위에서 짚던, 한미 공조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북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만 대화에 불응하면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오늘 또 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NPT 탈퇴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경제가 똑같습니까, 경제상황이? 10%대의 대외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80%가 넘는 대외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NPT 탈퇴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경제 제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쉽게 하면 됩니까?

전술핵 배치, 이것 말이지요. 이미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 핵무기입니다. 여기에다 전술핵 배치로 대응하자? 핵우산하에서 ICBM에 전략 핵무기 탑재해서 북한 공격하는 것, 30분 이내면 가능합니다.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술핵 배치가? 전술핵 배치가 오히려……

○**위원장 심재권** 질의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장관님과 통일부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 바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전술핵의 군사적인 효용성뿐이 아니라 NPT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제사회 안보의 근간이 되는 그 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확산 규범 그리고 지역 정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이지 그냥 쉽게 탈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통일부장관 답변하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술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가볍게 바꾸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가 견지하고 지켜 나가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운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석 위원** 방금 여당 간사님께서 야당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난성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야당 간사로서 한 말씀 좀 드리

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국회와 정부의 소명입니다.

북한이 최근 며칠 사이에만 해도 ICMB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수소폭탄급의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심정은 정말 우리 한국의 안보가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또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과연 온당하냐? 지금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문제를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시기에 뜬금없이 시기상 전혀 맞지 않는 대화 주장이나 하고 개성공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심재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그러한 충정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무슨 정략적인 흠집 내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간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국민의 안보 불안 또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공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정양석 위원.

○**이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야당 간사분들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의사진행발언에 국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의 이런 야당을 꾸짖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은 여당이 야당을 호통칠 때가 아니고 정말 진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핵을 완성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에서는 야당을 끌어안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려고 여당이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북한 핵개발이 야

당 때문입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고요.

위원장님께 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질의에서 이런 긴급현안보고, 과연 이게 우리 국회가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 정말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회의체나에 대해서 내가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언론이 보고 있고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자제하고, 또 즉답을 피해가면서 우리 대화가 걸돌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만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방식을 달리하고 속기록 없이 비공개 간담회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장관들도 정부 입장에서 야당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우리가 정말 놓친 것이 좀 있다. 그렇지만 도와다오’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장관들 답변 모두가 면피성 발언이고 언론에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행선을 긋는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간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비공개, 속기록 없는 정말 허심탄회한, 여야와 또 외교부, 통일부…… 이런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자신의 판단과 식견에 따라서 무엇이 우리의 국익인가를 위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분 장관께서도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권 잠깐만요.

지금 정양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간사위원들께서 의논하셔서 함께 좋은 결론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예요,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이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태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부분은 올바른, 바람직한 정치 문화와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는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은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야당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일단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의 비판과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부 여당의 태도고 이것이 협치와 소통을 위한 태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김정협 위원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야당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대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 모두 상호간에 말씀하실 때 이태규 위원님의 지금 말씀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만합시다.

○김경협 위원 그래도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요.

○정양석 위원 우리가 하는 게 마무리야. 그만해요.

○위원장 심재권 다음번에 내가 추가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김경협 위원 아니, 저는 왜 추가질의 시간을 쓰라고 해요? 저는 질의시간을 내서 하고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이렇게 따로 하고…… 골고루 해야지요.

○이태규 위원 질문 진행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공평하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심재권 나중에 다시 의견 말씀 나누실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고,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로 비웃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보면서 어쩌면 한반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북한의 태도, 도발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미 양국이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것을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북한의 어떤 전략과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한반도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과거 1차에서 최근 6차까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전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반응했고, 북한은 어떤 경고나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은 할 수 있지만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핵개발 억제 대책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리고 언젠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현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답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북한이 괴로울 정도의 제재와 압박을 끈기를 가지고 장기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결의가 그때그때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끈기를 갖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경제 제재 외에 완벽하게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사회·문화·스포츠 등 모든 부분에서 정말 국제사회가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는 정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부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화의 문은 열어 놓지만 북한을 비정치, 비군사적으로 교류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우리의 민족적 선의를 일정 기간 동안 접어야 되는 그러한 대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통일부장관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제재 외에 종합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고립을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이끌어 내는 게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핵 상쇄 억제 전력을 구축해서 핵을 사실상 무력화시킴으로써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술핵 배치나 독자적인 핵개발이 아니라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확장 억제력을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보장받고 이를 북한에게 확실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제로 유사시에 우리가 핵우산을 비롯한 핵전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고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북한에게 실질적 억제책으로써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이 부분이 가동이 되고 또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지만 이것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한미 간의 합의 및 제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런 두 축 위에서 북한에 끈기 있게 대처한다면 초조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우리가 규탄과 경고를 계속하고 북한은 본인들이 설정한 전략과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말려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전략적 접근,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한미 FTA의 문제하고 한미동맹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우일지는 모

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발언한 부분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이나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가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지만, 지금처럼 안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동맹국으로서의 적절한 태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 정부에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전에 우리 정부의 이런 부분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먼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것까지 생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상황일수록 또 냉정하게 길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좀 역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통일을 장기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균형 있게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FTA 폐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가 여기

대사관을 통해서 또 미국의 저희 공관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 통상교섭본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FTA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호혜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의회 지도자들의 목소리라든가 재계 목소리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 정리에 있어서 FTA에 관한 좀 더 객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공공외교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협약체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그런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국은 제도화해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협의회에 참석할 인사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인사가 결정이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개최해서 제도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북한의 압박·제재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국제사회의 틀이 달라진 게 2006년에 첫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 결의는 작년의 2270 그리고 2321 그리고 최근에 채택이 된 237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그 제재 이행에 대한 효과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끈기를 갖고 이런 제재를 이행함으로써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4강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그 회의체가 전통적으로 소프트 이슈, 경제협력이라든가 문화 교류 이런 것만 논의하는 그런 장이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 안보리 결의 이행이라는 그런 문구가 명시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지난번에 마닐라에서 ASEAN 차원에서도 강력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북핵·미사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만 우리 동북아의 4강하고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의 의제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

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원 세력을 저희가 꾸준히 다져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에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자산과 확장억지력을 양국이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로써 강구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앞으로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체는 구두약속에 불과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강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주러시아 대사 우윤근 사무총장을 내정을 한 발표가 있었으므로 4강 주재 대사를 전부 외부인으로 했습니다, 비외교관으로.

그런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 2010년에, 그 당시에 2009년까지는 주미 대사와 주일대사는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 권철현 전 의원이 하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직업 외교관이, 중국은 신정승 대사가, 러시아는 이규형 대사가 하고 있었는데 2009년 말에 중국과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이고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을 러시아 대사로 임명을 해서 2010년부터는 완전히 4강 대사를 다 비외교관 출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마 두 번째 비외교관 출신의

대사들로 4강 대사를 임명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님의 그런 인사니까 외교부장관이 평하기는 뭐하다. 그런데 외교부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4강 대사를 다 비외교관 출신으로 했는데 설명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도, 도하의 모든 신문이 사실과 또는 칼럼을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은 아니다 하는 점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을 주중대사로 보낼 때 주중대사는 1년 반밖에 못 하고 있었어요, 대개 3년이 임기인데. 그렇다고 서울에 무슨 좋은 자리를 쥐 가지고 뭐도 아니고 불러들여 가지고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떤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4개를 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언론과 또 아까 야당 위원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외교관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하셨는지, 아까처럼 그냥 정치적으로 비서실장 자리 하나 주기 위해서 주중대사 빼고 보낸 거냐? 지금은 정권 교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저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어떤 메시지가 국민들과 외교관들에게 던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저희 외교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지만 4강 대사 내정자들이 다 비외교관 출신이기는 하지만 한 분, 한 분 다 정치·외교 관련 분야에 있어서 아주 폭넓은 경륜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문제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든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셔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서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중한 국제 정세하에서 이분들의 경륜, 정치적 무게감 이런 것이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역대 정부에서도 주요 공관장에 대해서 정치적 임명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경륜 높은 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저희 외교부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조명균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6차 핵실험 관련해서, 지난 3일 오후 12시 29분경에 풍계리에서 핵실험이 감행되었는데 그때 최초로 국방부에서는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진도를 5.6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기상청에서는 진도 5.7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국방부 발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윤영석 위원** 아무래도 통일부장관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그때 진도 6.3으로 이것을 확정해서 발표했고 또한 중국 지진국에서는 역시 진도가 6.3 또 일본은 6.1, 그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0.1 차이가 일견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지진과 진도의 수치가 6.0 이상으로 높아지면 5.0대보다 진도 증가율에 비해서 파괴력이 10배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의도적으로 축소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불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날 NSC 회의 자체에서도 그러한 판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장비로 파악한 그대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영석 위원** 물론 의도적으로 축소는 있을 없을 것이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도 결코 안 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지질조사국이나 또 중국의 지진국에서 발표한 6.3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면 5차 핵실험에 비해서 6차 핵실험이 기상청이 발표한, 측정된 규모로는 한 5~6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오는데 미국이나 중국의 지질조사국이 측정된 규모로 하면 약 8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역시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통일부장관 조명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결코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날 NSC 과정에도 기상청에 다시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거기 장비로 측정된 결과는 5.7이다 하는 답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윤영석 위원** 향후에 관련 회의 시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한, 또 다른 주변국들과의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6차까지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인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폭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큼니다. 실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갱도가 붕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하 암반수나 이런 것이 피폭이 될 수 있고, 또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폐물들이 하천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큼니다.

실제 이번 핵실험 이후에 저도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죽 확인해 보니까 라오닝 성 선양 까지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피폭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단체에서 길주군 출신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그동안 계속 핵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심층면접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피폭의 증후가 의심되는 그러한 증세를 호소했다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길주군에 원인 없이 코에서 코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증상 또 이빨과 머리카락이 빠지는 전형적인 피폭 사례가, 피폭 증후군이 지금, 이런 것을 소위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돌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길주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풍계리 핵실험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피폭 여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국제사회에 이러한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피폭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만큼의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향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북한이탈주민 중에 그러한, 충분히…… 길주군 풍계리 인근 지역에 있는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사례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도 공유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그러한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또 그 장비에 따라서, 산정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NSC 회의를 할 때도 이것은 일차적인 우리의 추정치고 다른 나라들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탐지를 하면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쓰는 수치고요.

참고로 비엔나에서는 핵실험금지조약기구에서 어제 회원국을 상대로 기술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CTBTO가 갖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탐지 기록한 결과 ‘이게 5.9mb의 강도다’ 그런 게 어제 브리핑의 내용이었습니다만 오늘 CTBTO도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6.0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또 정밀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역시 추정치고 그게 탐지 장비, 장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석 위원** 우리 정부와 주변국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저도……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미안합니다.

정양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그게 아니라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격차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것에 야당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NSC 열리고 강경화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는 것 또 안보실장은 미국의 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것 외에 우리가 들을 내용은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뉴스를 볼 때 저희들도 자괴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대통령이, 내 당하고 다른 대통령이 물먹어서 좋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게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은 좋은데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NSC에 가서 또 대통령을 만나거든 당당하게 좀 해 주세요. 온 국민들이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걱정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4대 외교대사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수훈 일본대사 내정자 이분은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외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본대사로 갔습니다. 이것 워셀프 인사인지, 셀프 설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이것 검증하셨습니다? 이수훈 대사 내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잘못됐다. 이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고 위안부 합의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대사 내정자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

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외교하러 온 것인지, 싸우러 온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이 아무도 모르게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GSOMIA에서 손 떼라’, 시국성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GSOMIA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2012년에 ‘영토 분쟁의 나라하고 군사비밀정보를 뺏는다는 그런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연장이 됐어요.

이것 다 협의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GSOMIA 문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1년간의 운영을,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보고 나서 연장을 결정한다, 이런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만……

○정양석 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요, 1년 동안의 운영 갖고는 판단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운영해 봐야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소위 독자 제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미국이나 미국 행정부가 불평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말로만 제재·압박을 외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NSC에서 독자 대북제재 검토를 지시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치할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를 외치기 때문에 단독으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종편방송이 나오자 어떤 주민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줄로 아는데 국방부장관은 믿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보실장은 전술핵 도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다, 또 청와대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메시지인지 모르게,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술핵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향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은 두 분 장관들 정말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정말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견해 차이만 노정되는 이런 회의가 정말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늘 회의감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마치겠습니다. 코멘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펀드’라고 국제 민간 질병 퇴치 기구입니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이런 3대 질병 퇴치를 목표로 200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고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내 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각 나라 정부,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게 약 40억 불, 우리 돈으로 4조가 넘게 받아서 3대 질병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안팎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부해 온 것은 세계 20위권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나 캐나다보다 현저히 낮은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세계평화, 인류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로써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또 우리 기업들도, 관련 재단들도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외교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적

절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글로벌 펀드가 내년 2018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펀드 기부자 세계 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장님,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분 공감하고 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권** 내년 이 회의 개최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면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는 또 공공외교로서의 훌륭한 성과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협 위원** 위원장님께서 야당 간사님들한테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주시고 여당 간사는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당연하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초당적 협력,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여당 의원일 때에도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적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차 핵실험 못 막았으니까 정부가 사과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대 6차까지 오는 동안에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인데 지금 우리 정부 보고 사과하라고 공격의 타격을 우리 정부에 맞추기 이전에 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북 핵개발에 대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했고 2차 북핵

위기, 1차 북 핵실험도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서 막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왜 다시 또 과기가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면밀하게 보고 향후 우리가 대북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는 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9년 동안은, 2차 핵실험부터 5차까지 계속 핵개발이 급진전·고도화가 되는 동안에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한 것은…… 이것 막지 못했다고 야당이 정부보고 ‘사과하라’, 아마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것은 규탄하고 정부가 적어도 막기 위한 여타의 다른 대북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정부보고 사과부터 하라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정말 이러한 주장들이 실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라고 강요하거나 그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지난 9년 동안 북 핵개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을 때에는 신고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안보 문제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시적인 분노·감정들을 이용해서 그것도 역시, 일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부추기거나 안보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안보 문제를 대단히 냉정하고 국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가 정략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야가 함께 고민해 왔던 것처럼 적어도 안보는 그런 차원에서 힘을 실을 때는 신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정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여당·야당이든 간에 국회의원들

은 어떤 경우라도 본인의, 자기들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깊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그 발언은 존중돼야 된다, 그래야 상임위가 또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통일부가 활발히 돌아가야, 이게 북핵 해결 가능성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보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 강경책으로 해서 통일부가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현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대북정책 기초를 많이 바꾸셨지요. 180도로 바꿨지만 북한의 태도로 인해서 사실 현재 통일부가 역할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의 부분이 아마 통일부의 고민과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베를린 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이나 여러 가지 대북 제안을 하셨는데 이 후속 조치 외에 별도로 당국자 대화나 아니면 또 식량이나 기타 물품 지원 등 다른 것을 북한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다른 것을 북한에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것 외에는 일체 북한에 다른 것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부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해왔던 단체들이 북측과의 접촉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당국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하여간 제안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경우에 북한과의 어떤, 또 우리가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소통 창구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북측과 공식적인 소통 창구는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안합니까? 정부 성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달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래서 지난 7월 17일 제안할 때에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발표함으로써 북측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방송으로 하고 저쪽에서도 방송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측에서는 아직 우리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송 대 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북한 핵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금 아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우리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모든 것을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과거의 어떤 정부의 잘못된 대응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방치가 됐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싹싹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찰로 미국 달러화가 십몇억 불이 넘어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국민들의 목을 겨냥하는 비

수가 돼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과거 정부가 했던…… 그 당시 대통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돈이 건너가서 절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도 없고 핵무기가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됩니까?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 그런 것이, 그러한 식으로 가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달빛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대응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의 대화 구결 행위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유화정책 이런 것이 결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균열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전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얼마나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까? 하지만 대책 없이 반대하다가 이제 ICBM 쏘고 하니깐 그냥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여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런 것이 지극히 정략적이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성을 가지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빨리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대응하기를 촉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일체의 어떤 정략적이거나 또는 조금의 흠집 내기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충정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야당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도 오픈해야 됩니다. 귀를 열고 거기에 정말 뭔가 지혜가 없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을 종합적으로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은 실제 정말 갈팡질팡, 우왕좌왕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우리의 동맹으로부터도 불신을 당하고 왕따 외교를 하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 왕따 외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루빨리, 야당 시절의 그런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외교·안보 정책을 또 통일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와 압력을 같이 구사한다는 기조 위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어제의 핵실험 이후에 이런 고도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시킨다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상황에 따라서 구사하는 게 저희의 그런 어떤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우왕좌왕이라든가 대화를 구결한다든가 이런……

○**윤영석 위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윤영석 위원** 사드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 심재권** 윤 위원, 답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국내적인 그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밟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가 임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고,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조만간 나머지 네 대에 대한 임시 배치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해가 저희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어 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염려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독자 제재 방안을 이미 바닥이 나서 쓸 만한 게 없을 거다, 그런 염려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솔직하셔야 되지요. 방안이 없다든지.

우리는 한 달 내내 손 놓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막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채널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유엔 안보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제사회가? 자기 할 일들은 안 하

고 있고 그저 유엔 안보리에 의지해서……

또 정말 효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말을 안 들어서 화는 나지만 정말 제재를 해서 북한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고 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중국과 북경 사이에 밀무역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자꾸 야당에게 또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꾸 큰소리치고 당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장관께서 다들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 그리고 NPT 탈퇴 같은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해서, 정말 그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정말 맞기를 바라고, 그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NSC가 있고 나서 나는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미사일이 일본 북쪽을 향해서 쏘았는데, 미사일이 우리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느냐. 전쟁 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렇게 하겠느냐.’

정말 대통령으로서 그 발언에 대해서 품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정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솔했다…… ‘그래,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내가 NSC 소집도 늦게 하고 말을 아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진짜 소통의 대통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장관님들, 정말 소신에 찬 답변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소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거리가 느껴집니다. 제발 그런 소신 내부에 가서도…… 박근혜 정부, 내부 소통 안 돼서 무너지

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외교·안보, 두 분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국회에 와서 당당했듯이 대통령께도 당당한 그런 장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을 향해서 답을 해야지 청와대를 의식하면서 답을 하고 속기록에 남기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아까 서청원 위원께서 ‘남북협력기금’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은 느는 게 없다’고 장관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파악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아마 서청원 위원도 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남북경협 기금 조성 1090억이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양석 위원**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과연 이 시점에 이게 적절한지를 서청원 위원이 지적한 걸로 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강창일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위원님께서 보시는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의견 하나하나 모두 잘 유념하셔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반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민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

적 리스크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에도 함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로 국민들께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 수행 과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강창일	김경협	김무성	문희상
박병석	서청원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윤상현	윤영석
이석현	이수혁	이인영	이태규
정양석	최경환(한)	홍문종	

○청가 위원(3인)

박주선 이주영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기획조정실장	조현동		
동북아시아국장	정병원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함상욱		
북미국장	조구래		
국제법률국장	박철주		
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양자경제외교국장	윤성덕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상화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용현		
통일부			
장관	조명균		
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정승훈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이강우
남북회담본부장	한기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7. 8. 22. 추미애·이수혁·문희상·김영호·신창현·이석현·김정우·임종성·소병훈·민홍철·윤관석·이해찬·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8월 23일 회부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7. 8. 24. 박병석·윤관석·민홍철·박주민·손혜원·박정·김정우·신창현·소병훈·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

8월 25일 회부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8. 25. 전해철·정재호·박남춘·서형수·김경협·신창현·오제세·민병두·송기현·노웅래 의원 발의)

8월 28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8. 28. 이종명·김종석·김명연·김세연·정갑윤·김선동·김승희·박완수·김규환·조경대·신상진·권성동·金成泰·김성찬·나경원 의원 발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이상 2건 8월 29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8. 30. 박주민·박남춘·이철희·안규백·이재정·신경민·남인순·황희·민병두·전혜숙 의원 발의)

8월 31일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7. 8. 31. 김경협·이수혁·원혜영·문희상·김병욱·한정애·이용득·윤후덕·민병두·추미애 의원 발의)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7. 9. 1. 정부 제출)

이상 3건 9월 1일 회부됨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2017. 8. 31. 원유철·곽상도·김석기·김성원·김순례·김진태·민경욱·박덕흠·백승주·성일중·송희경·심재철·엄용수·윤재옥·윤종필·이우현·이종명·임이자·장석춘·정진석·조훈현·최고일 의원 발의)

9월 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7. 8. 21. 안민석·설훈·오영훈·전재수·조승래·김민기·신동근·이동섭·유은혜·김병욱·손혜원·박경미·노웅래·이찬열·민홍철 의원 발의)

8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2017. 8. 31. 김경진·주승용·최경환(국)·신용현·최명길·이찬열·김중로·김종희·윤영일·김삼화·유성엽·박주선·정동영·박지원·김동철·장병완·조배숙·장정숙·이동섭·이연주·박주현·김성식·정인화·최도자·이태규·송기석·조경태 의원 발의)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